

“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으로,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”

01. 문화유산 보존·전승 강화로 미래가치 창출

- ‘국가유산’ 체제 전환으로 문화유산 정책 패러다임 확장
-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추진,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편
- 미래무형유산 발굴·육성 | 21종목
전승공동체 다양한 전승활동 사업 신규 지원 | 16억원
- 문화유산 원형 보존을 위한 보수정비 지원 확대
* 세계유산, 국가지정·등록문화재, 공능유적 등 (‘23년 5,259억원)
- 민간 소유자·관리단체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지원 | 419억원
국보·보물 보유사찰 전기요금 지원 | 54억원(281개소)
- 지자체 문화유산 전문인력 의무배치 법제화,
현장 중심 신속·안전한 재난 대응체계 강화
* 문화유산 방재시설(139건 121억원),
안전경비원 확충(189개소 634명)



02. 문화유산 활용 가치 확대로 국민 삶의 질 향상

- 대한민국 대표 ‘문화유산 3대 축전’ 브랜드화
* 궁중문화축전(연 2회 / 5월, 10월),
세계유산축전(3개소 / 7월~10월), 무형유산축전(9월)
- 다양한 활용 프로젝트로 문화유산 관광 활성화
*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(10개 코스), 미디어 아트(8개소) 등
- 공정하고 차별없는 문화유산 향유기회 보장
* 공능 무장애공간 조성(‘23년 7개소),
장애인 전문해설 등 관람정보 접근성 개선
* 공능 프로그램 전화예매·추첨제 비율 확대 | 40% ▶ 50% 이상
- 문화유산 보존·복원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 신산업 육성
(디지털 트윈 등 14개 과제, 130억원)
* ‘국제문화재산업전’(9월),
문화유산 산업 인턴사업(200명, 산-학 연계)



03.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보존·활용정책 구현

- 과도하고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 혁신
* 규제지역 범위 재조정(‘23년 경기·인천 등 680건),
허용기준 적정성 검토(‘23년 경북 등 461건)
* 문화재 영향진단 도입으로 규제 통합·일원화 추진
- 매장문화재 진단조사(표본·시굴조사) 비용 지원
50억원 | 약 300건
* 주택·근린생활시설 등 생업시설 중심(건설공사 규모 무관)
- 문화유산으로 지역공동체 회복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
* 고도 역사도시 조성(61억원), 역사문화권 조사·연구(46억원),
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(30억원)
- ‘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’ 수립,
재해유형별·분야별 맞춤형 대응
- 역사도시 ‘신라왕경’ 디지털 복원(‘23~‘25),
문화유산 3차원 정밀 DB 구축 | 730건
원천데이터 민간 개방·활용 확대



04. 문화유산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

- 유네스코 유산 등재 추진 및 보호체계 강화
* ‘가야고분군’(세계유산),
‘4·19혁명기록물’, ‘동학농민혁명기록물’(세계기록유산)
*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 국내 도입
- 세계 속 우리 유산의 가치 확산으로 문화유산 한류 실현
* 인천공항 내 방문캠페인 홍보관 개관,
해외 주요도시 거점 글로벌 홍보 및 현지 전시·공연 확대
-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(ODA) 아프리카 권역까지 확대
* 이집트 문화유산 복원 등 (‘22년 36억원 ▶ ‘23년 48억원)
- ‘K-공유유산’ 제도 도입으로
국외문화재 실질적 보호·활용 확대

